

글로벌정책리포트
대외비

통일외교사회정책실
장경수 부연구위원

OECD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2026: 한국」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2026 Results : Korea -

2026년 7월 23일



OECD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2026: 한국」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2026 Results : Korea -

2026. 7. 23.(목) 통일외교사회정책실 장 경 수

- 한국의 국정 신뢰도는 51%로 OECD 평균(40%)을 상회했으나 정치적 발언권 인식은 2021년 55% → 2025년 37%로 5년 연속 하락해 '신뢰 회복'이라는 정부의 성과 프레임과 정면으로 배치
 - 고학력층의 정부 신뢰도(49%)가 저학력층(62%)보다 오히려 13%p 낮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은 정책 이해도가 높은 계층일수록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임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
 -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29%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해 정치권 전반에 구조적 불신이 확인된 만큼 당은 여권 공격과 동시에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자체 혁신안을 병행할 필요
- 정책적 시사점 및 추진 정책과제
 - ① 국정 신뢰도 상승의 이면 → 정치효능감 및 정치발언권 지표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 플랫폼 법제화 및 소통 의무 강화 당론 추진
 - ② 고학력층/청년층의 낮은 신뢰도 → 고학력층/청년층 자문단 및 공청회 등 정치참여 채널 확대
 - ③ 정당 신뢰 위기는 여야 공통 과제 → 당 신뢰 자체 개혁 방안으로 차별화 도모
 - ④ AI 정책의 안전장치 공백 → 공공 AI 개인정보·투명성·공정성 담보 법안 발의

1. 연구 배경 및 목적

- OECD는 2021년, 2023년에 이어 2025년 세 번째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Trust Survey)」¹⁾를 실시, 2026년 6월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
 - 1위 스위스, 2위 아이슬란드, 3위 노르웨이, 4위 룩셈부르크, 5위 멕시코, 6위 한국
- 이재명 정부는 2025년 국정 신뢰도가 51%로 상승(2023년 37%→2025년 51%, OECD 평균 40% 상회)했다는 수치를 국정운영 성과로 홍보
 - 행정안전부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 중앙정부 신뢰도 역대 최고 순위 달성'(6/30 보도자료)
- 그러나 세부 지표를 분석하면 ▲정치적 효능감·발언권 인식은 오히려 지속 하락(2021년 55%→2025년 37%) ▲정당에 대한 신뢰는 29%로 최하위권 ▲고학력층의 정부 신뢰가 저학력층보다 오히려 낮은 역전 현상 등 표면적 수치와 배치되는 구조적 문제가 병존

1) OECD 회원국 33개국 및 가입후보국 5개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행정·사법·입법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 한국은 국정 신뢰도뿐 아니라 일상적 행정서비스 체감도, 복잡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AI의 공공부문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까지 포괄적으로 조사

- 이에 본 보고서는 OECD 조사 원자료²⁾를 세밀히 분석하여 이재명 정부의 '신뢰도 상승' 프레임이 갖는 통계적 허와 실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당의 대응 논리 및 메시지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① 국정 신뢰도 추이 및 국제 비교

- 한국의 국정 신뢰도(10점 척도 중 6~10점 응답 비율)는 2021년 49% → 2023년 37% → 2025년 51%로 등락을 거쳐 회복, OECD 평균(40%)을 11%p 상회
 - 다만 2023년 37%에서 2025년 51%로의 급격한 반등은 **특정 정책 성과보다 조사 시점·정치 국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단기적 수치 변동을 근거로 한 성과 홍보의 신뢰성은 별도 검증이 필요
- 기관별 신뢰도는 경찰 47%, 법원 41%, 공무원 41%(OECD 평균 45%로 평균 이하), 지방정부 46~52% 수준이나, **정당에 대한 신뢰는 29%로 조사 대상 기관 중 최하위 기록**
- 특히 한국의 경우 법·질서 및 행정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정치 관련 기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OECD 전반의 패턴과 상이한 양상을 보임
 - 이는 행정 신뢰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시사

② 계층·집단별 신뢰 격차

- 정파성·정치적 효능감(발언권)에 따른 신뢰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한국은 54%p로 OECD 평균(47%p)보다 격차가 더 큼
 - **정부 결정에 대한 발언권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 간 신뢰도 차이가 매우 큼**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격차는 19%p로 OECD 평균(18%p)과 유사한 수준
- **학력별 격차는 OECD 평균과 반대로 나타남**
 -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신뢰도(49%)가 고졸 미만 저학력층(62%)보다 13%p 낮음
 - 이는 **정책 이해도가 높은 계층일수록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여론 주도층·전문가 집단 공략 논리에 활용 가능

2) OECD(2026),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2026 Results: Navigating Rising Expectations and New Horizon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eb63fec-en>.

- 연령별로는 청년층(18~29세, 49%)이 50대 이상(53%)보다 낮아 세대 간 신뢰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성별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2%p 낮아 OECD 평균(7%p)보다는 작은 편

③ 일상적 행정서비스 체감도

- 13개 일상 행정서비스 지표 중 9개 지표에서 한국이 OECD 평균을 상회
 - 행정서비스 만족도 79%(2025, 2023년 76%), 헬스케어시스템 만족도 74%, 교육시스템 만족도 60% 등 대체로 양호
- 반면 급여신청 등 수급 절차의 공정성 인식은 57%로 2023년(50%)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3%는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데이터) 사용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2021년 54% → 2023년 43%로 급락 후 2025년 47%로 부분 회복에 그쳐 2021년 수준을 여전히 하회
 - 데이터 활용 관련 정부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
- 지방의회(국회의원)의 응답성('의견에 성실히 답변') 인식은 30%로 OECD 평균과 동일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입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④ 복잡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 15개 지표 중 13개에서 OECD 평균 상회
 - 근거기반 정책결정 인식 2025년 52%(2023년 41%), 세대간 이익균형 인식 2025년 39%(2023년 32%) 등 개선세
- 그러나 '정치체제에서 국민이 발언권을 가진다'는 인식(정치적 목소리)은 2021년 55% → 2023년 39% → 2025년 37%로 지속적으로 하락
 - 유일하게 악화 추세를 보이는 핵심 지표
- 이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은 개선되었을지 몰라도 국민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기회는 오히려 줄었다'는 이중적 평가로 해석 가능하며, 여권의 '소통 강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계임

⑤ 인공지능(AI)의 공공부문 활용에 대한 인식

- 한국 국민 중 AI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에 불과, 국민 다수가 AI 정책에 대한 이해 기반이 낮은 상태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는 59%, 비용절감 기대는 62%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는 39%, 공정한 처우 보장에 대한 신뢰는 45%, AI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는 48%에 그침
- 전반적으로 한국의 AI 관련 정부 신뢰 지표는 6개 항목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나 '안전장치(개인정보·공정성·투명성)' 관련 지표는 '효율성(비용절감·맞춤화)' 관련 지표보다 낮게 나타나 국민이 AI 도입의 편익은 인정하되 위험 관리에는 확신이 부족함을 시사

3. 정책적 시사점

① '신뢰도 상승' 프레임의 이중성

- 국정 신뢰도 51%라는 총량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세부 지표들은 상반된 흐름을 보여 정부·여당의 일괄적 성과 홍보는 통계적 정합성이 부족
- 특히 정치적 효능감·발언권 지표의 지속적 하락은 '신뢰 회복'이 국민의 실질적 정치 참여 확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경기 인식, 비교집단 효과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논평·질의에서 집중 검증할 지점

② 계층세대 갈등의 정치적 함의

- 고학력층의 낮은 신뢰도는 전문직·화이트칼라·지식인 계층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하며, 당의 중도·수도권 확장 전략에 있어 유효한 공략 지점이 될 수 있음
- 청년층의 낮은 신뢰도(49%, 50대 이상 대비 4%p 낮음)는 세대 갈등 이슈에서 여전히 정부의 청년정책이 체감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청년 정책 어젠다 선점 필요

③ 정당 신뢰 위기는 여야 공통 과제

- 정당 신뢰도 29%는 전체 조사 대상 기관 중 최하위로, 이는 특정 정당이 아닌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을 의미
 - 우리 당 역시 이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여권 공세와 동시에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혁신 메시지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④ AI 정책의 '안전장치' 공백

- 공공부문 AI 활용 기대는 높으나 개인정보보호·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취약

- AI 관련 입법 공백 시 향후 신뢰도 하락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입법 대응이 필요한 영역

4. 정책과제

① 핵심 추진 방향

- ① **(정치적 효능감 제고 입법)** 국민 발언권 지표의 지속 하락(55%→37%)을 근거로 입법과정 국민참여 플랫폼 법제화 및 국회의원 소통 의무 강화(민원 응답기한 명문화 등)를 당론으로 추진
- ② **(정당 신뢰 자기혁신 선언)** 공천 과정 투명성 강화, 계파정치 근절, 당내 의사결정 공개 등 자체 개혁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정당 불신 29%' 프레임에서 여야 차별화 도모
- ③ **(행정서비스 공정성 강화 입법)** 급여·수급 신청 공정성 인식이 57%에 머무는 현실을 반영, 사회보장 급여 심사기준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발의

② 세부 정책과제

정책과제	핵심 내용	관련 지표
청년 정치참여 확대	청년 정치참여 채널 신설·청년 공천 확대	청년 신뢰 49%
고학력·전문가층 소통	정책 자문단·공청회 확대로 전문가 신뢰 회복	고학력 신뢰 49%(역전)
AI 안전 입법 선점	공공 AI 개인정보·투명성·공정성 담보 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 신뢰 39%
데이터 활용 신뢰 회복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공시제 도입	데이터 정당성 인식 47%
국회 응답성 개선	국민 민원·질의 법정 응답기한 명문화	국회 응답성 30%